

위기 상황 시 인권 제한의 윤리학

2020년 11월

송지우(서울대)

두 가지 질문

- 위급상황 시 인권제한은 정당화가능한가? 언제, 어떻게 그러한가?
 - 윤리학적 분석: 정당화가능성 vs. 가령 효율성
- 인권제한을 수반하는 위급상황 대처 방안 가운데 어느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정당화가능한가? 복수 방안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무엇인가?

질문의 구체화

- 현 판데믹 대응의 두 가지 유형: 봉쇄(lockdowns)와 감시(surveillance)
 - 집합금지, stay-at-home 명령, 국경 통제 등
 - 위치추적 프로그램, 개인정보 접근, CCTV 활용 등
- 이동의 자유, 사생활권 등 기본권의 제한

위급상황 시 인권제한은 정당화가능성

- 온정주의 논변
- 공익 논변
- 개인 사이 의무 논변

온정주의 논변

- 제한 조치를 받는 사람의 이익(이해관심), 안녕, 복지 등을 위한 제한 조치
 - 안전 수칙, 특정한 종류의 계약의 무효화
- “자유가 아니면 (자칫하면) 죽음을 달라!”
- 이 논변에 제한의 이유가 온전히 담겨있는가?

공익 논변

- ...결국 타인에 대한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면?
- 공익(common good) 논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도 정당화 허들이 존재함.
 - 위급상황 시 공익 논변: 평소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바도 일부,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정당화 허들 ↑↑↑

공익 노면



공익 논변

- 공익이란?
 - 내용 식별·결정의 어려움
 - 불분명한 내용에 기댄 악용의 위험
 - 중요한 정치적 숙의 차단
 - 소수자의 탄압·정당한 요구 외면

공익 논변



개인 사이 의무 논변

- 의료 체계 과부하와 붕괴 위험 → 1) 개별 의료진의 부담, 2) 체계 과부하와 붕괴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 침해, 3) 체계 과부하와 붕괴를 막기 위한 봉쇄나 감시 조치에 따른 개인 부담 등 개인 사이 관계상 정당화가능성을 따지는 논변
 - 소수자의 시각이 더 선명하게 반영됨

봉쇄와 감시의 정당화가능성 > 0

- 일반 원칙: 국가권력이 강압하는 봉쇄 또는 감시와 추적처럼 인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타인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에 중대한 손상을 입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이에 대한 해당 조치의 강압은 정당화가능하다.

방역 지침 위반의 정당화불가능성 > 0

- 일반 원칙: 상황이 위와 같다면,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 생명 또는 건강의 손상을 위협당하는 개인들에게 그리고 (2) 이들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 인권 제한을 감수하며 지침을 수반하는 타인에게 정당화불가능하다.

(결정적인) 질문

- 국가권력이 강압하는 봉쇄 또는 감시와 추적처럼 인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가?
 - 필요성(necessity), 비례성(proportionality) 등 비상사태 시 작동하는 통상적인 기준들
- 불확실성? 정책적 선택 단계에서 위험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예측가능하다면”의 해석.

(결정적인) 잔여 질문

- 예 1: Bluetooth 기반 vs. GPS 기반 위치추적
- 예 2: 정보가 중앙화된 위치추적 시스템 vs. P2P 시스템
- 예 3: 완전 봉쇄 vs.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조치, 거리두기 의무화
- 예 4: 입국 금지 vs. 입국자 전원의 자가격리

(결정적인) 잔여 질문

- 국가의 실책이나 타인의 비협조로 (더 강한) 인권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 예: 초기 경고 무시, 자발적 지침 비준수 등
 - 시점 구분이 필요할 수도(현재의 위급성 고려)

봉쇄 vs. 감시

- 제한의 강도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 **잔여 인권 위험**
 - (대부분) 감시 조치는 개인 정보의 보관과 활용에 대한 잔여 인권 위험(residual human rights risks)이 발생함.
 - 조치에 대한 둔감함이 잔여 인권 위험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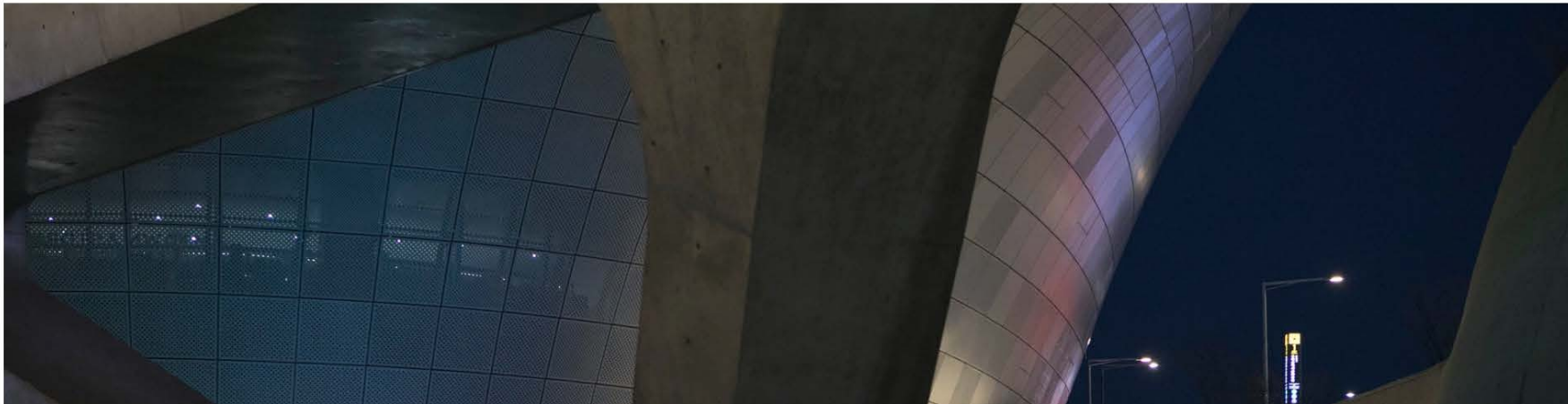
봉쇄 vs. 감시

- 국가권력의 부당한 감시 전력이 있거나, (현재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체제처럼?) 정보의 활용과 행방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 규범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해당 기술이 신기술일 경우 잔여 인권 위험은 증가함.
 - Cf. 위치추적 시스템의 임무 변경(mission creep) (Annette Zimmermann)

봉쇄 vs. 감시

Major Security Flaws Found in South Korea Quarantine App

The defects, which have been fixed, exposed private details of people in quarantine. The country has been hailed as a pioneer in digital public health.



정치적 선택과 민주주의

- 폭넓은 참여·절차적 투명성으로의 ‘민주주의’(0)
- 다수결에 따른 정치 결정으로서의 ‘민주주의’(?)
 - 위급상황 시 인권 제한은 상대적 취약층이자 민주적 절차 내 소수자에게 더 위협적일 가능성이 있음. (예: 감시 도구의 임무 변경에 대한 인종적·종교적 소수자의 정당한 우려)

감사합니다.

jiwuh@snu.ac.kr